

노동자 건강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최민 상임활동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등장한 구호 중 하나는 ‘싸우는 노동자들은 이미 비상계엄 상태였다’라는 것이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이 계엄을 선포한 사태를 ‘비유’로만 대할 수 없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이 구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계엄령 이전에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기업이 약속했던 조선업 하도급 구조 개혁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가 수백억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일 수 있을까? 가르치던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고 지원하다, 부당전보와 해고까지 당한 교사 노동자에게 이 사회와 학교는 주체들의 민주적 행위를 억누르는 체계와 다름없다.

윤석열 파면 투쟁에 나온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토대를 친위 쿠데타와 같은 방식으로 더 훼손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다는 절박한 외침, 계엄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파괴된 민주주의의 결과가 계엄령에까지 이르렀다는 깨달음을 담은 비명이다.

최소한의 노동자 건강 보호 제도마저 배신한 자본주의의 위기

넌시 프레이저에 따르면, 정당하고 효과적인 공적 권력은 자본 축적의 조건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그들의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하지만 자본의 무한한 축적 충동은 그 공적 권력을 불안정에 빠뜨린다. 계엄령 이전 한국 노동자의 건강 상태는 이미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시도했던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대표적이다. 외부의 제한이 없으면 노동자의 몸과 마음이

망가질 때까지 고삐 풀린 듯 착취하는 자본주의를 제어하고 유지하기 위해, 공적 권력이 만든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어찌 보면, 노동자를 다치게 하고 근육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생산 속도와 생산 방식은 그대로 둔 채, 이미 망가진 몸과 마음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자본의 입장에서선 값싼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최소한의 보장제도마저 무력화하고자 했다.

정부가 나서서 '나일롱 환자'라는 거짓된 프레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부족한 급여와 휴업 일수로 고통받고 있는 산재 노동자들을 도매금으로 묶어서 비난했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산재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 권력의 최소한의 역할마저 포기함으로써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되묻게 할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시간 개악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 역시 자본주의 초기로부터 만들어져 온 최소한의 계급 간 합의이기도 하다. 하루 노동시간 제한이 없던 시절, 하루 14시간 16시간씩 일하던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이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재생산을 기약할 수 없다는 자본가 계급의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합의는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의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루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역시 침해하고자 했다.

후보 시절인 2021년 '주 120시간 바짝 일하게 하자'던 윤석열은 2023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자 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기존 양대 노총 외부의 MZ 노조들을 포함한 전 국민적 비판을 받은 뒤에야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특정 업종, 특정 직종에서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지속해서 시도했다. 사실 주 52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주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150여 년 전의 사회적 합의에 여전히 미달하는데도 말이다.

이것이 왜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이주노동자 건강 관련 정책 역시 후퇴를 거듭했다. 2020년 12월 캄보디아 노동자가 영하 20도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지 4년이 넘었다. 이후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엔 숙소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내버려둔 탓에, 여전히 많은 농어촌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에서 살고 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에 따르면, 난방이 전혀 되지 않고 화장실이나 주방이 모두 외부에 있으며 온수도 나오지 않는 낡은 컨테이너

를 활용한 불법 기숙사가 만연해 있다. 경기도에만 농어업 사업장에 1500개, 제조업 사업장에는 이보다 더 많을 걸로 추정된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계절노동자를 지속해서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가 늘었다. 조선소 등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대량으로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비자 정책을 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내몰렸고, 국내 정주하는 불안정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갈등만 심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제와 같은 권력구조, 현행 선거나 정당 제도로 국한될 수 없다. 간단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여전히 1년에 천여 명에 달하는 사회, 그런데도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예방하지 않고도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사회에 민주주의는 없다.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불안정노동자라는 이유로,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주거 환경과 일터 환경에서 살아가야 상황은 우리가 ‘함께’ 사는 민주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노동자로서 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며 다양한 관계를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선 모두가 동등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정책은 그 자체로 지난 3년 내내 민주주의의 기반을 침식시켰다.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계엄령 선포가 법적 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을 넘어선다. 그동안 사망한 산재노동자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것, 그것은 윤석열을 넘어 노동자를 다치고 병들고 목숨 잃게 만드는 기득권 정치를 파면시키는 것이다.

윤석열을 넘어, 기득권 정치를 넘어

“노동자 건강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언은 윤석열을 넘어, 윤석열을 가능하게 했던 기득권 정치를 같이 넘어서자는 제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토대를 침식시켜 온 친기업 경제 정책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계엄령 이후, 정권 퇴진 투쟁에 힘을 쏟은 민주당과 오히려 윤석열을 변호하며 극우로 나아가는 국민의힘은 현정체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민생’ 법안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들의 이해관계가 어디서 일치하는지가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미래자동차·자율운행선박 등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12월 3일 이전도 이미 계엄이었다. 1월 8일 조선헌청노동자들의 노숙 농성장이 있는 한화 본사 앞에서 열린 평등으로가는수요일 사진 : 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이 모두 노골적으로 특정 기업들에 퍼주기 위한 법안들이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며 2월 제정을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1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라며 “기업의 성장 발전이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가 밝힌 ‘기업 주도·정부 지원’ 시대, 주식시장 선진화·활성화, 신성장 동력 창출의 시대에 일하는 사람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짓밟힐 가능성이 크다.

민주사회의 주체라는 노동자 민중, 시민의 삶을 외면하고 특정 세력에게만 권력과 부를 몰아주는 ‘경제’ 정책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의 위기를 가져온다. 서부지법 담을 넘었다가 유치장에 있다는 극우 청년이 한국에서 “민주란 이름이 공화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공화주의를 ‘모두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 이익과 공

동체의 안녕을 중시한다는 입장’으로 볼 때, 거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선거 시기에만 민중의 힘과 권리를 인정하는 지금의 기득권 양당 체제가 사실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안녕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 지금 극우 정치가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노동자 건강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키자”라는 주장은 정권 교체를 넘어 ‘노동자 건강을 위협해 온 체제로부터의 전환’을 해내자는 제안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기 긴급한 민주주의의 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파면이 끝나도 “모두가 폭력을 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 때까지” 광장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던 한 시민의 자유발언도 같은 마음일 거다. 계엄령 이전에 이미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던 민주주의의 파산을, 차별이 없고 평등한 세상을 꿈꿔 온 사람들이 함께 넘어서자는 얘기다. **인터**